

시민 저널리즘의 발전을 위한 제언(II)

이 봉 렬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 〈오마이뉴스〉 올해의 뉴스게릴라 2회 수상 (사는 이야기 부문 / 뉴스 부문)
- 〈오마이뉴스〉 명예의 전당 으뜸상 수상

뉴스가 있는 곳에 사는 시민이 곧 현장기자다

2004년 4월 19일 밤, 부천에 있는 한 백화점에서 건물 외벽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중 11층 높이의 철제 지지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 사고로 공사 중이던 인부 3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다. 나는 그날 밤의 일을 생생히 기억한다. 기자수첩을 들고 그 현장에 직접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난 직업기자는 아니다. 〈오마이뉴스〉에 기자회견원으로 가입해서 필요할 때 쓰고 싶은 만큼의 기사를 송고하는 시민기자다.

시민기자인 내가 백화점 사고를 취재하게 된 건 순전히 그 백화점과 내가 사는 집 사이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100미터가 채 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소방차 소리가 크게 들리고,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큰 길로 모여들었다. 나 역시 사고 현장으로 갔다. 곳곳에 널부러진 공사자재와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삼풍백화점 참사를 연상케 했다.

2년 가까이 시민기자 노릇을 했던 탓에 구경꾼 중

한 사람으로 그냥 있을 순 없었다. 좀 더 가까이 가서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 그러자 경찰이 막아섰다. 난 '취재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냥 물러났다. 운동복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있는데 다 카메라는커녕 손에 불펜 한 자루도 없는 나를 기자라고 여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부랴부랴 짐으로 뛰어 가서 기자수첩과 카메라를 챙겼다.

현장에 다시 갔더니 마찬가지로 경찰이 막아섰다. 난 기자수첩을 보여줬다.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에게는 기자증이 없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기자증을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여태껏 나에게 기자증이 필요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기자수첩 하나면 충분했다. 나를 막아섰던 경찰이 길을 열어줬다.

가까이에서 본 현장은 혼란스러웠다. 소방차와 병원 구급차가 수시로 드나들고, 건물 잔해를 치우기 위해 중장비가 동원됐다. 어느새 기자들도 저마다 자리를 잡고 현장을 중계하기 바빴다. 난 현장 상황과 사상자 수를 기록하고, 몇 장의 사진을 찍은 후 현장을 빠져 나왔다.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송고했다. 백화점 외벽 붕

피 사고에 대한 간단한 스트레이트 기사였다. 하지만 <연합뉴스>에서 이미 속보가 나온 후였고, 내 기사만이 갖는 차별점은 없었다. 십 분쯤 지났을까. <오마이뉴스>에서 전화가 왔다. 현장에 다시 가라고 했다. <오마이뉴스>에 필요한 건 <연합뉴스>식 속보가 아니라, 현장의 모습 그대로라고 했다.

그때부터 아침 해가 밝아 올 때까지 난 현장에 있었다. 건물 잔해가 하나씩 치워질 때마다, 사상자가 한 명씩 실려 갈 때마다, 사고 현황에 대해 브리핑이 있을 때마다 <오마이뉴스>에 휴대전화로 현장을 중계했다. 부천에 사는 또 다른 시민기자를 현장에서 만난 후로는 현장은 내가, 사상자가 실려 간 병원은 그 시민기자가 맡기로 했다. 그 후로 기사는 현장 4신까지 이어졌고, <연합뉴스>를 비롯한 여타 언론의 기사와는 차별화 되는 <오마이뉴스>다운 기사가 하나 만들어졌다. '뉴스가 있는 곳에 사는 시민이 곧 현장기자'가 되는 게 바로 시민 참여 저널리즘¹⁾의 시작이다.

기사는 제대로 만들어졌지만 난 잠 한 숨 제대로 자지 못한 채 회사에 출근을 해야 했다. 사고 현장에서의 나는 시민기자지만, 평소에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기 때문이다. 회사 동료들은 그 기사를 보고 '수고했다'며 격려해 주기도 했지만, 일부는 회사 일에 지장을 주지나 않을까 싶어 시민기자 노릇을 마뜩잖게 여기기도 했다.

이 점이 시민기자들이 느끼는 갈등 중 가장 큰 것이다. 취재와 기사 작성에 시간을 빼앗기는 만큼 생업에 지장을 받는다. 그렇다고 생업에 충실하다 보면 시민기자로서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결국 스스로도 흥미를 잃고 중도 포기하게 된다.

그렇다면 난 왜 시민기자를 하고 있는 걸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오마이뉴스> 창간 이후 6년 동안 지속적으로 시민기자 노릇을 하게 만들었으며, 그로 인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 되돌아보고자 한다.

내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우선 난 왜 시민기자를 하고 있을까. <오마이뉴스>를 알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기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일이 없다. 전공이 이공계일 뿐 아니라 반도체 만드는 회사원 생활을 오래해 왔기 때문이다. 다만 사회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그에 대한 의견을 언론사 게시판이나 토론방에서 풀어 놓는 일은 즐겨한 정도다.

그런데 <오마이뉴스>가 생긴 이후로 시민기자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었다. 게시판에 올리는 의견이 아니라 내 이름을 걸고, 책임을 지는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 이제껏 내 이름으로 출고된 기사가 500개 가까이 된다. 6년 간 500개면 매주 한두 개는 꾸준히 써왔다는 이야기다.

돈 때문일까? 기사 쓰기를 일종의 부업으로 여기는 걸까? 그건 아닌 것 같다. 기사를 작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취재를 위한 시간을 제외하고도 두세 시간은 족히 걸린다. <오마이뉴스>에서 주는 원고료는 기사가 메인 톱에 걸릴 경우 2만 원이다. 원고 쓰는 시간에 회사에서 잔업을 하면 그 금액의 몇 배는 더 받는다. 돈 때문이었다면 차라리 야근을 하는 게 낫다. 지난 6년간 기사 쓰는 시간 동안 야근을 했다면 난 회사에서 특진을 두 번도 더 하고 남았으리라 확신한다.

1) 편집자 주 : 본 글은 현직 시민기자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민 참여의 의미를 보다 강조하기 위해 '시민 저널리즘' (civic journalism) 대신 '시민 참여 저널리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곳에 사는 시민이 곧 현장 기자’
 시민 참여 저널리즘의 시작

권력욕이 있어서였을까? 기자 출신의 정치인도 꽤 많고, 기자 노릇 자체가 권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일전에 대통령을 친구라 부르며 자기보다 나이 많은 택시 기사를 폭행한 어느 신문사 기자의 사례를 보면 기자들은 대단한 권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지난 6년간의 내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가 취할 수 있는 권력이라는 건 없다. 만나는 사람 모두가 시민기자인데 권력은 무슨….

가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내가 쓴 기사가 소개되기도 하고, 나 자신이 시민기자제의 사례로 취재 대상이 된 적도 있다. 그게 한두 번이라면 재미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내 일상을 방해받는 것도 만만치 않아 그런 걸 노리고 기사를 쓰는 경우는 없다.

내가 시민기자 노릇을 하는 이유는 기존 언론의 지형 아래에서는 나 같은 회사원, 아니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땅의 노동자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천민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놀림 당하기만 하는 노동자들이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이야기들은 너무도 많은데, 마땅히 그 이야기들을 털어 놓을 곳이 없다. 설령 털어 놓는다 해도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이들도 없다.

왜 인터넷이며, 왜 <오마이뉴스>인가?

여기에 대안으로 떠 오른 것이 인터넷 공간이다. 인터넷은 그것을 사용하는 누구에게나 ‘누리꾼’이라는 호칭으로 열려 있는 공간이다. 게시판에 올리는 글들은 그 작성자가 누구인지를 묻지 않고 그 글 자체만으로 평가를 한다.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이

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인터넷이다. 하지만 인터넷 게시글이 파편화되어 흩어져 있을 때는 그다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따라서 일정 수준의 게이트키퍼링을 통해 인터넷 게시글이 신뢰성과 공정성을 획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오마이뉴스>는 바로 그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인터넷 게시글이 기사로 탈바꿈할 수 있는 것이다. 게이트키퍼링 역할이 너무 강조되면 기성언론의 닫힌 구조를 벗어날 수 없고, 너무 느슨하면 언론으로서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적절한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오마이뉴스>는 애초부터 시민 참여 저널리즘을 바탕으로 시작된 인터넷 매체이기 때문에 게이트키퍼로서의 역할에 대한 많은 노후우를 갖추고 있다. <오마이뉴스>가 지닌 언론으로서의 신뢰성과 인터넷 매체로서의 개방성이 내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넓은 공간을 마련해 준다. 난 노동자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오마이뉴스>라는 공간을 활용하여 수천, 수만의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듣고 전해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직접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몇 해 전 전국 5개 발전노조의 파업이 있었을 때, 난 노동자의 입장에서 노동부장관에게 보내는 편지글 형식을 빌려 장관의 입장을 따져 물은 적이 있었다. 그 기사는 <오마이뉴스> 톱기사로 올려 졌고, 며칠 뒤 노동부장관 명의의 반론이 <오마이뉴스>에 실렸다. 시민 참여 저널리즘이 노동자와 장관을 한 자리에서 토론하게 만든 것이다.

6년 전 시민기자를 시작했을 때는 시민 참여 저널리즘이라는 개념 자체가 낯설었기에 <오마이뉴스>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지금은 많은 매체들

이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나는 여러 인터넷 매체 가운데 <오마이뉴스>를 선택했다. <오마이뉴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마이뉴스>를 선택했다는 것, 이게 중요하다. 뉴스를 가지고 있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아니고서는 시민 참여 저널리즘은 결코 지속될 수가 없으며, 시민 참여 저널리즘을 표방하는 매체들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돌아 봐야 한다.

시민 참여 저널리즘과 관련하여 이야기하자면 <오마이뉴스>는 결과물이 아니라 도구다. 저널리즘에 참여하는 시민과 독자 사이를 이어주는 도구. 따라서 더 좋은 도구가 나타난다면 시민기자들은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 대한 책임

할 말 많은 노동자로서 좋은 도구를 만났기에 시민기자를 시작할 수 있었지만, 그 이유만으로 그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활동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분명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건 바로 내 아이들 때문이다.

혼자 살 때는 정치를 논하거나, 사회 부조리를 비판하는 글을 주로 썼다. 그 때는 그런 모습만 눈에 띄었다. 하지만 두 딸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보니 아이들이 살아갈 환경에 자꾸만 시선이 간다. 교육문제가 대표적일 것이고, 여성문제나, 장애인 문제도 남의 일 같지가 않다. 환경이나 인권 관련된 문제도 피부에 와 닿는다.

난 내 딸아이가 살아 갈 세상이 사람 살만한 세상 이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아이 뿐만 아니라 남의 아이, 세상 모든 아이들이 다 살만한 세상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아이를 낳는 것이 아이에게 죄를 짓는 일이 되어 버린 이 사회를 그래도 아이들이

희망을 갖고 살만한 그런 곳으로 만들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기사를 쓴다.

내 아이들이 살아갈 가까운 미래가 반칙이 통하지 않는 사회,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사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 성 차별을 포함해서 모든 차별이 사라지는 사회, 노동하는 이들이 존중받는 그런 사회의 모습을 갖추길 바란다. 그게 내가 시간을 쪼개어 기사를 쓰는 이유다.

물론 다른 이유로 기사를 쓰는 시민기자들도 많다. 내 이웃의 아름다운 삶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기 위해서, 내가 아는 지식을 공유하고 싶어서, 다른 이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혹은 반기 위해서, 기성언론이 눈감아 묻혀진 뉴스를 전하기 위해서...

시민기자는 기사를 이렇게 쓴다

이제까지 시민기자 노릇을 왜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금부터는 기사를 어떻게 쓰는가를 이야기할 순서다. 난 시민기자로서 기사를 쓰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게 하나 있다.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난 노동자이면서, 두 아이의 아버지고, 학부모이다. 생물학적으로 남자이자 유색인종이며, 비장애인이고, 어른이며, 가진 것 별로 없는 서민이기도 하다. 나름대로의 종교가 있고, 계급적으로 기층민중의 한 사람이다. 지역차별이 아직도 존재하는 이 나라에서 내가 태어난 지역을 의식하고 있으며, 조국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다는 사실도 인식한다.

자기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기사를 쓴다는 것은 자기가 서 있어야 할 곳과 자기가 연대해야 할 대상이 누군지 안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야만 어떠한 사안을 놓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에 앞서 약자의 편에 서는 일인가를 먼저 고려하게 된다. 최소한 내가

시민기자들은 기사의 원고료를 쌓는 대신
기사쓰는 재미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자부심을 더 중요시해

기사를 쓰는 원칙은 그렇다. 거기에 세상은 진보해야만 한다는 평소 내 생각을 덧붙인다.

이런 점이 시민기자의 글을 편향적 혹은 주관적이라고 폄하하는 이유가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누구나 그러하지 않은가? 직업기자라고 해서 온전히 공정한 입장에서 사실만을 전달하는 건 아니다. 공정을 가장한 편향보다는 처음부터 자기의 정치적 혹은 사회적 좌표를 공개한 후 합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기사를 쓰는 게 훨씬 솔직하고 건강하다. 시민 참여 저널리즘은 기자들에게 좀 더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도록 만들었다.

나의 계급성에 맞춘 기사쓰기 원칙이 옳다는 건 아니다. 다만 시민기자로서 기사를 쓸 생각이려면 최소한 자기만의 기사쓰기 원칙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러지 못한 기사는 기성 언론에서 찍어내는 봉어빵 기사와 하등 다를 바 없게 되며, 굳이 시민 참여 저널리즘이 따로 존재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민기자 노릇은 누구나 할 수 있는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무나 할 수는 없다.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남에게 전해 주고 싶어 하는 건전한 시민'이라면 누구든 시민기자를 할 수가 있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한국에 있는 이주노동자에서부터 외국의 현지인까지 누구나 가능하다.

하지만 시사 따라잡기, 소재 발굴, 취재, 교열까지 혼자서 해야 하기 때문에 품이 많이 든다. 기사쓰는 게 주업이 아니기 때문에 생업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 기사 작성을 위해 취재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받을 만큼 원고료를 많이 받지 못한다.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것은 이러한 자기희생을 즐겁게

감수하면서 기사를 쓸 수 있는 사명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사쓰기가 즐겁지 않으면 독자들을 감동시킬 수가 없다. <오마이뉴스>의 성공을 확인한 여러 언론들이 시민 참여 저널리즘에 동참했지만 온전한 성공을 거두었다는 소식은 아직 듣지 못했다. 상당수의 기존 독자를 가지고 있고, 막대한 돈과 기술을 투입하면서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까닭은 그들이 시민 기자들에게 재미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성 언론들은 시민기자를 자사에서 월급을 받는 직업기자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했다. 기존 사이트 옆에 자매지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오마이뉴스>보다 원고료를 조금 더 주면 당연히 옮겨 올 걸로 생각했다. 하지만 시민기자들이 참여할 공간이라고 해봐야 기사를 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재미없는 곳으로 옮겨가지 않았다. 시민기자들은 기사의 대가로 원고료를 쌓는 대신 기사 쓰는 재미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고자 한다. 오로지 시민 참여 저널리즘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매체만이 시민기자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

시민 참여 저널리즘에 대한 비판 과연
합당한가

<오마이뉴스> 창간 당시부터 시민기자 노릇을 해 온 탓에 내게 시민 참여 저널리즘에 대한 비판의 소리를 들려주는 이들이 가끔 있다. 그 중에는 내가 귀담아 들어야 할 이야기도, 시민 참여 저널리즘이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하지만 기성언론에는 관대하면서 유독 시민기자에게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사안 자체를 침소봉대하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

인 것 두 가지를 꼽자면 시민기자가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기사를 왜곡한다는 의혹과 기사 신뢰성 자체를 낮추어 보는 시선이다.

기사쓰기가 세인의 관심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여론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기 위해 <오마이뉴스>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개인이 속한 기관이나 단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가 등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공적 외피를 두르고 사적 이익을 챙기는 것은 시민기자가 아니라 자사 이기주의에 치우친 기사를 대량 생산해 내는 기존 언론사들이다. 일부 전문지나 지방지의 앵벌이 행태 역시 잘 알려져 있다.

시민기자들에게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시민기자들에게만 요구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더구나 시민 참여 저널리즘은 인터넷 언론의 특징인 독자와의 쌍방향 소통의 결과로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시민기자가 사적 이해가 걸린 기사만 쓰면 독자들의 검열에 바로 걸린다.

시민기자들의 기사는 검증되지 않아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옳지 않다. 시민기자들은 대부분 자기 발 담그고 있는 곳의 이야기를 기사로 올린다. 해당 분야에 전문가일 경우가 많다. 나 역시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딸아이의 학부모로서 아이들 교육문제에 대한 기사를 쓰라고 하면 그 누구보다도 더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 줄 자신이 있다.

직업기자가 전문가의 이야기를 인용하여 쓴 기사와 전문가가 직접 자기 이름 걸고 쓴 기사 중 어느 쪽이 더 신뢰할 수 있을까? 내 선택은 후자다. 지난 5월 31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은 <오마이뉴스 인터내셔널>과 기사 링크를 교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는 신문 역시 시민기자의 기사를 신뢰한다는 방증이다.

시민기자의 등장과 저널리즘의 진화

그렇다면 시민기자의 등장과 시민 참여 저널리즘은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을까?

시민 참여 저널리즘의 등장 이후 기성 언론의 직업기자와 시민기자가 기사의 질로 경쟁을 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기성 언론의 직업기자와 유명 칼럼리스트들이 긴장하게 되었다. 출입처의 보도자료를 빼껴 내던 기자들이 보도자료 외에 또 다른 하나를 찾기 시작했다. 시민기자 노릇을 하다 보니 가끔 내 메일함에도 여러 단체에서 보내 온 보도자료가 들어온다. 그 보도자료의 내용과 똑같은 기사를 크레디트만 바꿔 찍어낸 신문을 보면 쓰레기통을 찾지 않을 수 없다. 시민기자의 수가 늘어날수록 보도자료에 의지한 기사는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현장에 가지 않고도 기사를 잘도 써 냈던 기자들 역시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공연소식을 프로그램만 보고 쓰고, 시위현장을 방송 뉴스를 보고 쓰던 기자들이 현장에서 올라오는 시민기자의 생생한 소식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교수나 변호사 등 일명 공인 받은 지식인들만 쓸 수 있는 줄 알았던 칼럼도 시민기자들로 인해 더욱 풍성해졌다. 외국 철학자의 이야기를 잔뜩 인용하고 선 거기에 살을 덧붙였던 나태한 칼럼은 이제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시민기자들이 삶 속에서 건져 올린 생생한 칼럼과 일대일로 비교되는 건 전문 칼럼리스트들에게는 악몽이지 않을까?

시민 참여 저널리즘은 기사의 소재도 바꿔 놓았다. <오마이뉴스>는 라디오 방송의 청취자 사연 정도로 소개되던 사는 이야기를 기사의 위치로 올려놓았다. 아이의 첫걸음마, 군대에서 먹었던 '뽕굴이'에 대한 추억, 치매 걸린 어머니의 일상이 톱뉴스로 선정되고, 독자들이 환호했다. 기사를 전달하는 방식도 달라졌다. 때로는 편지글로, 때로는 대화체로, 사진과

시민기자 구성의 외연을 넓히는 등
참여 폭을 확대하고 시민 참여 저널리즘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및 교육 시행해야

동영상만으로도 뉴스를 전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시민 참여 저널리즘의 가치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참여로 언론 민주화를 완성해 나간다는 데 있다. 80년대 군부가 물러나면서 언론의 민주화가 시작되었다고는 하지만 이 나라 언론지형은 아직도 몇몇 보수언론이 독과점하고 있으며, 선출되지 않은 그 권력의 폐해가 너무도 크다. 언론을 통제하던 주체가 군부에서 족벌 또는 재벌로 옮겨졌을 뿐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여기에 '다윗의 돌팔매'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시민 참여 저널리즘이다. 새로운 독점 언론권력에 의해 가려지고 왜곡되었던 서민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언론의 민주화이며,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성과만으로도 그 의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시민 참여 저널리즘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껏 시민 참여 저널리즘의 등장이 가져 온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만 시민 참여 저널리즘이 온전히 자리 잡았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시민 참여 저널리즘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소식을 가진 시민기자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시민들의 참여가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마이뉴스>만 해도 새로이 시민기자로 참여하는 숫자가 초기에 비해 줄어든 상태다. 시민들의 참여도가 떨어지면 독자들 역시 외면하기 마련이다.

시민 참여 저널리즘이 최근의 정체를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여성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오마이뉴스>의

경우 여성시민기자의 비율이 30%를 넘지 않는다. 시민기자의 기사가 주로 생활밀착형이라고 한다면 여성의 삶에 기반한 기사의 수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이는 거꾸로 여성의 참여가 늘어날수록 새로운 소식의 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여성 섹션을 전면에 내세우고, 편집이나 기사 선택에 있어 여성의 시각을 우선 고려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 여기에 여성기자의 글에 주로 등장하는 악성 독자댓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기사를 쓴 여성이 댓글 때문에 기사 쓰기를 주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시민 참여 저널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라면 특종 또는 속보에 대한 강박을 버려야 한다. 시민기자들은 기사쓰기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은 사건을 접한다고 해도 기사 작성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 따라서 신속한 보도보다는 정확한 보도, 또 다른 시각에서의 보도를 앞세우는 게 옳다. 속보에 대한 강박을 버리지 못하면 시민기자의 기사는 지면에서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셋째, 기사 형식에 대한 파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시민기자들은 기존 언론의 관행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그 자유로움이 기사 형식에 대한 파괴로 나타나는데 게이트키퍼를 담당하는 매체들이 기존 관행에 얽매어 기사로 채택하기를 주저한다면 새로운 시도가 사장될 수 있다. 시민기자의 등장은 기존 언론의 보완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언론의 형태를 창조하는 것이다. 저만치 앞서가는 시민기자의 의식을 매체가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발목을 잡는다면 시민 참여 저널리즘은 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

넷째, 시민기자에 대한 언론계 전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시민기자의 취재기사 중에는 발품이 많이 든

것도 많다. 하지만 대부분의 매체들이 자발적 참여를 이유로 보상에는 인색하다. 취재과정에서의 경비에 대한 보상이 어떤 식으로든 이루어져야 보다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언론사 또는 언론단체에서 시민기자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시민 참여 저널리즘에 대한 경험과 이해를 갖춘 이들이 전달교육을 함으로써 처음 시작하는 이들이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언론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매체 간의 차이를 떠나서 시민기자 간의 연대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같은 지역에 있는 시민기자들이 모여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각도의 취재를 할 수도 있고, 동일한 사안이 각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서로 비교해 가며 기사를 작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민기자의 권익에 대한 동일

한 목소리를 이끌어 내는 것 역시 시민기자 간의 연대로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시민기자들 역시 자신의 기사가 독립된 언론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책임질 수 있는 기사를 써야 할 것이다. 다른 이들에게 내놓는 글인 만큼 기사의 완성도를 고려해야 함은 물론, 스스로 일정 수준의 학습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러한 것이 강박이 되어 시민기자로서의 시도를 가로막아서는 안 될 것이다.

시민 참여 저널리즘의 등장으로 언론으로부터 객체에 머물러 있던 시민들은 주체와 형식, 마감시간이 따로 없는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막강한 도구를 가진 당당한 주체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독자들 역시 누구나 시민기자일 수 있으며, 시민의 참여가 언론을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